

데스크시각



송기동 편집국부국장·예향부장

“어린 시절 늘 부모님한테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지역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 순천역 앞 광장. 박소정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했다.

노란 풍선과 깃발을 든 사회단체 회원과 시민·학생 등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역사적 진실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상생의 띠 잇기’를 하며 순천역에서 2km 가량 떨어진 팔마경기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같은 시각, 팔마 실내체육관 동쪽에 위

70년, 멀고 먼 해원(解冤)의 길

지한 여순사건 위령탑 현장에서는 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월 초부터 순천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고, 10월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을 도와 달라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어 20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여순사건 특별법’ 국민 청원

꼭 70년 전인 1948년 10월 19일 밤 8시,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던 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다. 육군본부에 제주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해 일어난 4·3 무장 봉기를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14연대에 내리자 이 부대 군인들이 ‘동족상잔(同族相殘)’을 반대하며 항명한 것이다. 반군은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고 구례·보성·광양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한 후 강력한 진압 작전에 들어갔

다. 특히 계엄령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기조로 활용했다.

반군의 점령과 군경의 탈환 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반란군에게 점령됐던 지역을 되찾으면 부역자 심사가 진행됐다. 이때 우익 인사가 일명 ‘손가락 총’으로 반군 협력자를 지목하면, 혐의자는 재판이나 확인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총살이나 일본도로 참수되는 등 즉결 처형됐다. (사)여순사건 순천유족회에 따르면 순천에만 18곳의 학살 매장지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형제묘’는 여수 중산 초등학교에서 집단 처형된 주민과 여수경찰서에 갇혀 있다 총살된 주민 125명이 화장돼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제주의 경우 2000년 1월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어 2003년 10월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도민과 유족들에게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죄했다.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 반면 여순사건은 2008~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돼 군인

과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임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 등 여러 내용을 권고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부모 얼굴 대신 꽃그린 할머니

‘해원(解冤)은 ‘원통한 마음을 풀다’는 의미이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유족들은 경제적 궁핍과 연좌제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다. 광주시 동구 소재 동 ‘캘러리 생각상자’에서는 여순항쟁 70주년 특별전(~10월 31일)이 열리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유족 7명이 자화상과 부모 얼굴을 그렸다. 부모 얼굴 대신 해바라기 꽃을 그린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할아버도 본적이 없으니까... 글고 누구한테 야고(이야기)로도 어찌고 생겼는지 들어 보도 못 해서 올 언니를 꽃으로 그렸제.”

이제는 좌우 이데올로기 이념의 벽을 허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상생과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은 과거사 청산과 ‘해원’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환갑이라는 기념일을 있고 지낸다. 내가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부모님 연세가 60세에 이르는 생일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지인들과 동네 분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열었다. 평균 수명이 60세에 훨씬 못 미쳤던 시절에 환갑을 맞이한 것은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잔치를 특별히 챙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환갑을 마치 조신 시대이나 있었을 법한 전통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미 60이라는 나이는 매우 흔한 나이로 취급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건강 증진 정책

로 뒤따르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 문제이다. 예를 들면 요즘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인데 마치 유리창이 오래돼 뿌옇게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백내장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02년에 인구 100만 명당 6500명 정도였는데 2013년에는 1만 2600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그 만큼 노인 인구가 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신장 투석 환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신장 투석실이 대학 병원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한두 군데 있었던 것이 요즘에는 지방 소도시에도 몇 곳씩 운영되고 있다. 이 또한 노령화의 영향일 것이다. 콩팥 질환은 당뇨나 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한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성인병이라 불리는 당뇨나 혈압이 40대에 발생해 20년 정도 유지되면 신체 곳곳의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며 특히 콩팥의 기능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치료비와 건강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된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의 소득 단절에 따른 국가 재정의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2025년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의 관련 기관들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가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약국이나 병원도 자신들의 수익을 높여려는 비급여 진료나 투약을 지양하는 대신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환자가 관리한 내용을 평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당뇨 질환은 최근의 추세로 보면 30대 정도에서 발생해서 평생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많고,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비만과 함께 흔히 발생한다. 당뇨는 식이 요법이나 운동 요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면서 자신의 당뇨 수

준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자신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식사나 운동을 조절하게 되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치료 형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고가의 처방 의약품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주로 외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당뇨 의약품이 수입되고 있는데 아마도 끊임없이 고가의 약품이 공급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방 조제하여 투약하게 되면 갈수록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최신 약물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부담이 적다고 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당뇨 환자와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요양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단순히 약물로만 치료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학교 수준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청소년기부터 질환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건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社說

외자유치 전국 꼴찌 광주시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시의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총액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데다 여건이 비슷한 전북에 비해서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2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 추세가 지속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시도별 외국인 투자 도착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년 동안 외국에서 2163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 127조 5075억 원의 0.16%에 불과한 규모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전북의 1조 1268억 원과 비교해도 19.2%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의 70% 이상을 서울(47%), 경기(12.4%), 인천(11.2%)이 차지할 만큼 수도권 쏠림 현

상이 극심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2008년 9조 5152억 원에서 2017년 13조 2570억으로 증가했지만 광주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2010년 226억 원에서 2011년 894억 원으로 반짝 급증했다가 2012년 181억 원으로 꺾인 뒤 지난해 90억 원, 올해는 3분기까지 34억 원에 그쳤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데 수도권에만 집중될 경우 균형 발전을 크게 해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지역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 또한 투자 유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투자 급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강화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빛더미 속에서 ‘핑핑’ 성과급 잔치 했더니

한국농어촌공사가 9조 원에 이르는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에게는 연 1%대 저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지난 5년간 임직원에게 총 392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아껴도 모자랄 판에 임직원의 복지에만 돈을 ping ping 쏟아 부은 것이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과 임차금에 대해 지난해 연 1.58%의 저금리 이자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이 혜택을 받은 임직원 은 총 1089명으로, 지원 금액은 792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는 대출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 금리는 3.42%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가 지침을 어겨

가며 직원을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공사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도 모두 3922억 원에 이르렀다.

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에 따르면 경영 성과가 없는 장기 위탁 교육생까지도 성과급을 받았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기준 8조 751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올해는 9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에게 1%대 금리 혜택을 준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해 평균 1460억 원의 부동산을 팔아 경영을 이어 가고 있는 판에 성과급을 ping ping 지급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행이라 하겠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상시 감사 체계를 마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출범 이래 권력 기관이나 권력자를 사칭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 기관의 정점인 청와대는 사칭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 시절, 가짜 이강석 사건은 권력에 약탈 수밖에 없는 관료들의 습성이 낳은 코미디였다. 이강석은 이기붕 국회의장의 친아들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1공화국의 황태자였다. 1957년 9월, 22살이던 강성병은 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이강석 행세를 시작했다. 경주 경찰서를 찾아간 강 씨가 ‘아버지의 비밀 부부

만 달러의 연기료를 받았을 텐데 대신 벌을 받게 됐다’며 세태를 비꼬았다.

2013년 8월에는 사기 전과 2명이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 대기업을 보기 좋게 속였다. 50대 조 모 씨가 대우건설 사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며 조 씨를 보낼 테니 일타리를 주문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다음 날 본인이 사장을 찾아가 입사 원서를 제출하는 등 1인2역을 맡아 셀프 취업을 했다. 대우건설은 청와대에 확인도 하지 않을 이용해 가짜 이강석 고 조 씨를 부장으로 1년간 채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과 청와대 관

청와대 사칭

로 풍수해(風水害) 시찰을 왔다”고 하자, 속이 남아간 경찰서장이 불국사 관광을 시켜 주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해 줬다.

‘찔뚫매는 관리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강 씨는 영천과 봉화를 옮겨 다니며 3일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경북 도지사 관사에 들렀다가 결국 털미가 잡혔다. 자신의 아들이 이강석과 고교 동기였던 까닭에 도지사가 실제 이강석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우리들이 “관리들의 부패를 테스트할 수 있었다. 할리우드 같았으면 60

계자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기 사례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섯 가지 유형의 사기 사례를 보면 범인들이 모두 핵심 권력층을 사칭했다. 광주에선 유력 정치인이 청와대 사칭 사기에 속았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청와대가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씹부터 자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청와대 사칭 범죄가 먹히는 사회라는 사실은 우리를 씹스럽게 한다.

/장필수 편집국장·전남본부장 bungy@

기고



임채석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장

올해는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에는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자 1929년 11·3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생한 지 90주년을 맞는다.

민족적 차별 교육과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벌였던 11·3학생독립운동은 규모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인 여학생을 희롱한 것을 목격한 우리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한·일 학생간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찰

광주학생독립운동, 평화를 넘어 통일로

의 일방적인 한인 학생 탄압은 억눌려있던 학생들의 반발을 샀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 감정을 자극하게 됐다. 11월 3일 광주에서 광주고보(현 광주제일고)와 광주농업학교(현 광주자연과학고) 학생들이 주축이 돼 학생 시위 운동으로 확대되고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 시위는 그해 12월에 경성과 평양, 함경도 등 국내 지역과 만주 간도 등으로 번져갔고 이듬해 5월 까지 전국적인 동맹 휴학, 항일 학생 시위로 커져갔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인 당시 평양은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성 단체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시위를 추진했다는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학생독립운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등 320여 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당시 320여 개 학교, 5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1600명이 넘는 학생이 구속됐고

2900여 명이 퇴학이나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 광주에서만 26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 수감되었었던 전국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다. 북한 지역에서도 128여 개교가 참여하여 전체 학생독립운동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제2의 3·1운동이었던 학생독립운동은 그 중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을 때에 일어난 우발적이고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활발한 학술연구를 통해 전체 민족 운동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학생독립운동을 재평가하고 위상과 격에 맞는 정부 기념식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광주에서 열린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초 2·28대구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대 항일 독립운동임에도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책임 있는 관심이 필요하고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 기념식단계 격에 맞게 치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부터 학생독립운동기념식 행사는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기념 행사에 관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면 기념식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계기 교육과 부대 행사는 교육부가 담당하며,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 정상들의 만남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과 학생독립운동 90주년 남북한 공동행사 제안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학생 교류가 평화를 이끌고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 통일 디딤돌 교육 사업으로도 분명한 목표와 의미가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칭·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